



## I. 추진 배경

- LIBOR 조작\*(12.6월) 등을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·사용되는 “금융거래 지표”에 대해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리 강화 추세

\* '12년 영국·미국·스위스 당국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LIBOR 조작한 혐의로 바클레이즈, UBS 은행 등에 100억 달러 이상 벌금 부과

- 주요국(영국, EU, 호주, 일본 등)들은 IOSCO(국제증권감독기구)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('13.7월)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
- 그중 EU 벤치마크법(Benchmark Regulation)은 EU역외의 금융거래 지표에 대해서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공적규율 도입이 필요

\* EU금융회사는 '19.12.31일까지 EU의 승인을 받지않은 역외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 금지

- EU 승인을 받는 방식은 세 가지이나, EU 벤치마크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승인을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

제3국 벤치마크 승인방법

구분	요건	비고
<b>보증</b> (Endorsement)	• EU 금융회사가 해당지표에 대해 보증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	• 실현가능성 낮음
<b>인증</b> (Recognition)	• <u>해당지표 관리에 대한 제3국 감독당국의 증명(certificate)</u> •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기관이 EU역내 법적대리인을 둘 필요	• 증명 의무가 금융당국에 부여 • 산출기관이 부담해야할 법적 대리인 비용이 상당히 큼
<b>동등성</b> (Equivalence)	• IOSCO를 충족하는 “ <u>해당국 법령에 의해 감독</u> ”받고 있을 것	• 법령 제정시 동등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으므로 명료

- 국내적으로도 CD금리 담합 의혹, 코픽스 산출·공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규율근거가 없어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
-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금융거래지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

## Ⅱ. 주요 내용

### 1. 금융거래지표 및 중요지표 지정 (법안 제2조, 제4조)

- **(정의)** 금융거래지표\*란 대출·예금의 이자 등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 또는 교환해야 할 금액 및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그 금액 및 가치를 산정하는 때에 준거가 되는 지표로 정의

\* 예) 코픽스(대출 등의 기준금리), CD금리(IRS거래 등의 기준금리)

- **(중요지표 지정)** 금융위원회는 관련 금융거래의 규모, 다른 지표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지표 중 중요한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함으로써 동법상의 행위준칙을 적용

### 2.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관리체계 마련 (법안 제5조)

- **(등록)**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
  - 공정하고 투명한 중요지표 산출을 위해 기초자료 관리,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산출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함

#### < 산출업무규정 >

- ① 중요지표 산출방법과 산출절차(산출방법서) 및 중요지표 설명서
- ② 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
- ③ 산출기관 소속 임직원이 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해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
- ④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산출업무를 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
- ⑤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**(관리위원회)** 산출기관은 『중요지표 관리위원회』를 구성·설치하고 산출업무규정 마련·변경, 기초정보 수집 등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

### 3. 중요지표 산출 및 사용에 대한 행위준칙 (법안 제6조~제8조, 제10조)

□ **(산출 중단)**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조치명령권을 규정

○ 중요지표 산출을 중단하기 전에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금융위는 중요지표를 지속적으로 산출(최대 24개월)할 것을 명령 가능

\* 중요지표의 타당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출기관이 기초자료 제출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산출기관이 금융위에 신고토록하고 금융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제출기관에 대해 기초자료 제출을 지속(최대 24개월)할 것을 명령 가능

□ **(산출기관 의무 등)** 중요지표 산출기관과 사용기관이 지켜야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규정

○ 산출업무규정을 공시하고 이에대한 적절성 및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적절한 조치의무\* 규정

\* 위반행위의 즉시 시정 또는 제출기관에 대한 위반행위 시정 요청, 위반사항이 발견된 제출기관의 기초자료를 중요지표 산출에서 제외 등

○ 산출방법서를 변경하거나 지표산출을 중단하려고 할 경우 미리 사유, 시기 등을 공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야함

□ **(사용)** 사용기관은 지표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\*을 마련하고 관련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에게 중요지표와 비상계획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

\* 중요지표를 대체할 다른 금융거래지표 또는 이밖의 금융거래의 지급액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할 기준 등

□ **(중요지표 조작 등 금지)** 중요지표의 기초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때에 왜곡, 조작,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

○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금융시장 교란 및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어 고의적인 중요지표 조작(manipulation) 가능성을 차단

○ 또한, 상당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중요지표 제출기관과 산출기관이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

### 3.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사·제재 등 (법안 제11조~제16조)

- ☐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위는 중요 지표의 기초자료 제출, 산출·사용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명령\* 가능

\* 예)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강화, 특정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일시제한 등

- ☐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왜곡, 조작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- ☐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기관 및 그 임 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규정

## Ⅲ. 향후 일정

- ☐ 입법예고(6.18~7.30), 규제위·법제처 심사, 차관·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